

**Vol. 02**

2021.08.13

#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545-5115

F. 02-3444-5115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권경아전임 kakwon@hjcustoms.co.kr

## CONTENTS

I. 관세법령 개정사항

II. 기타 법령 개정사항

III. 조세심판원 사례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I. 관세법령 개정사항

## 1. 「관세법」 개정

## (1) 개정이유

소비자 편의 제고 및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구매대행업자 처벌규정 마련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구매대행업자는 화주와 연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를 적용하도록 함.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환불시 관세 환급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입국 시 자진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보완	우편제출에 따른 청구기간 특례,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청구 등을 허용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함.
처분 집행정지 기준 보완	관세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 시 처분의 집행 등이 정지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처분의 집행정지 등을 결정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중소·중견기업 검사 비용 지원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3) 시행일

'21.07.01

## I. 관세법령 개정사항

## 2.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 (1)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 지원 목적

##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학술연구용품 감면제도 대상 조정	학술연구용품 감면제도에 따른 관세 감면대상 중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대상 조정(총 36개 품목) - 가스분석기, 데이터분석기 등 40개 품목 제외 - 보호차단기, 전동엑추에이터 등 6 개 품목 추가

## [추가품목]

HS CODE	품명
8423.89	트럭 스케일
8443.19	대면적 스크린 인쇄기
8501.31	전동 액추에이터
8501.64	단락발전기 시스템
8535.21	보호차단기
9618.00	마네킹테스트 모듈

## [제외품목]

HS CODE	품명
8419.89	반응기
8421.39, 8479.89	배기가스 입자 포집기
8424.20, 8479.89	전동유동코팅 건조기
8456.30, 8479.89	절단기 또는 와이어커팅기
8457.10, 9031.80	밸런싱 머신
8460.12	폴리싱기
8460.90	진동연마기
8462.21, 8462.29, 8462.99, 8479.89	정밀금속절곡기
8462.99, 8479.89	등방가압 프레스
8477.20	압출기
8477.80	마운팅기

I. 관세법령 개정사항

HS CODE	품명
8477.80	필름 권취기
8479.81, 8479.89	세척기 또는 세정기
8479.82	체 진동기
8479.89, 9031.80	성능 시험기 또는 성능 측정기
8479.89	자동 핵산 추출기
8514.20	마이크로웨이브 시료전처리장비
8526.10	레이더
8537.10, 9027.10, 9031.80, 9032.89	가스분석기(가스 분석기 제어기 포함)
9027.10, 9030.89, 9031.49, 9031.80	분광분석기, 형광분석기, 흡광분석기 또는 엑스선 광전자분석기
9027.80, 9031.80	질량분석기(질량검출기 포함),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9030.33, 9031.80	전력 또는 전류 분석기(전력 또는 전류 측정기 포함)
9031.49	필름 표면 분석기
9031.80	배터리 충·방전설비 또는 강유전체 특성 측정기, 두께측정기, 표면측정기 또는 힘측정기, 데이터 수집기 또는 진동계측분석기, 복합사이클 부식시험기, 비파괴검사기 또는 X-ray 장비, 수분 함량 측정장치, 열상 분포측정기, 온도측정기, 온도측정계 또는 표면온도 측정장치,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물성측정기, 유변측정기, 입자 수 측정기 또는 입자상 물질 측정 장비, 응력 측정기, 전자스핀공명, 접촉강도시험, 강도시험기 또는 낙하시험기, 코팅막경도 측정기, 피로시험기 또는 내구시험기, 프로브카드 분석기, 3차원측정기(비접촉 3차원 측정기 포함) 또는 형상측정기

(3) 시행일

’21.07.27

## I. 관세법령 개정사항

##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 개정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협정관세율 제정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할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서를 종전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함.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 협정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입한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수입한 것인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3) 시행일

'21.07.27

## II. 기타 법령 개정사항

### 1. 「부가가치세법」 개정

#### (1) 개정이유

신택세제 선진화 및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운영여건을 고려한 간이과세 관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신택재산 관련 납세의무자 정비	신택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위탁자의 명의로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택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연대납세의무자 추가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신택의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공동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공동수탁자 중 신택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대표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함
전자적 용역 공급장소 명확화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임을 명확히 함.
영수증 발급대상 및 적용기간 조정	종전에는 모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대상을 조정하고, 해당 영수증 발급의 적용기간을 정함.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이었었던 것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천800만원 기준을 유지함

#### (3) 시행일

'21.07.01

## II. 기타 법령 개정사항

## 2. 「약사법」 개정

## (1) 개정이유

불법구매자 처벌, 의약품 허가관리 투명성 확보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의약품 품목허가 절차 정비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에 작성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품목허가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을 최대 3개로 제한함.
중증 희귀질환 의약품 허가요건 명확화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 목적인 의약품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안전성·유효성 확증을 위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원료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절차 마련	원료의약품 수입의 경우에도 해외제조소를 등록하도록 함.
장애인의 오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책 마련	안전상비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약품 등 안전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결과 공개로 제도의 투명성 제고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의약품의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3) 시행일

'21.07.20.

## II. 기타 법령 개정사항

### 3. 「의료기기법」 개정

#### (1) 개정이유

품질책임자 관리 감독 및 제재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제조업자 교육절차 마련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은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고시받은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함
의료기기 공급시장 투명성 제고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의료기기 봉합의무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인체 삽입 의료기기,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자에게 봉합 의무를 부과하고, 봉합한 의료기기는 개봉판매 할 수 없도록 함

#### (3) 시행일

'21.07.20.

## II. 기타 법령 개정사항

## 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및 자영업자 지원 등

##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신규 위탁자 공급 의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봄.
공급시기 근거 규정 마련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마련	세관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또는 관세 조사 등이 있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수입하는 자가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공제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급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 II. 기타 법령 개정사항

### 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이중과세 문제 해소

####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과세물품에 대한 공제요건 완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를 허용함.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 근거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함

### Ⅲ. 조세심판원 사례

## 1. 쟁점물품인 프로젝터의 품목분류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000까지 000 소재 000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으로 0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기타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28.69-0000호(한-중 협정관세율 5.3 ~ 6.4%, 이하 “제8528.69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나. 청구법인은 2020.6.3. 쟁점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K 제8528.62-0000호(WTO 양허관세율 0%, 이하 “제8528.62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000원 및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3. 이를 거부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쟁점물품이 비록 자체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를 통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등과 연결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는 무선 네트워크를 갖춘 기계장치와 연결이 된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로 자동자료처리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거나 직접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제 8528.69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3) 결정일

2021.06.21. (조심 220 관 0183)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1. 자유무역협정(FTA) 등 특혜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전국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자유무역협정 등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임.

이번 지원대책으로 수출기업은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신고, 수출물품 운송수단 적재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됨.

그동안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세관에서 임시개청\*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임시개청(臨時開廳) :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임시개청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공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임시개청 신청서 작성

- 문의 : 관세청원산지관리시스템(1544-0645)

---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2. (관세청) 잠정·확정가격신고 업무처리 안내

관세청 심사정책과-790(2021.7.9.)과 관련

관세청은 「관세법」 제 28 조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21.2.23. 시행)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서와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또한, 동 「고시」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2021 년 7 월 1 일 수입신고분부터 납세의무자는 확정가격신고를 할 때 확정가격신고서와 과세자료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야 함.

- 문의: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973)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3. (인천세관) FTA 정보제공 채널 개설 안내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 1 과-1107(2021.7.1.)과 관련.

인천본부세관은 FTA 를 활용하는 국내 수출입기업에 원산지 위험정보\* 및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비대면 소통창구인 '인천본부세관 FTA INFO' 카카오톡 채널 개설.

*\* 원산지 위험정보 :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 등 FTA 협정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FTA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정보*

이 채널은 △관내 주요 수입물품의 위험정보 △수출입물품 원산지 검증시 유의 사항 △FTA 법령정보 등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지 형식으로 구성하여 7월 2일부터 주 1 회 알림톡으로 제공 예정.

- 카카오톡 채널 추가 방법 : 카카오톡 앱 실행 검색창에 “인천본부세관 FTA INFO”입력 채널 추가

- 문의 :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 1 과 (032-722-5911)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4.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중국 신장産 Hoshine 社 실리카 및 관련제품 억류명령”조치 알림**

미국 관세청(CBP)은 2021년 6월 24일에 중국 신장 Hoshine 업체가 생산한 실리카 및 관련 제품(Silica-based Product)을 강제노동을 이유로 억류명령\* 조치.

\* CBP가 강제노동 조사 착수 후 강제노동으로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but not conclusive)가 발견된 경우(19 C.F.R § 1242(e))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 신장\*의 억류명령 대상 업체로부터 실리카 및 관련 제품을 수입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강제노동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반송되는 등 통관상 어려움 발생 가능.

\* 2020년 이후 억류명령 18건 중 9건이 중국 신장지역 관련된 조치로 유의 필요

따라서 원산지가 중국 신장인 실리카 및 관련제품을 수입 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할 예정인 기업은 미 관세청(CBP)의 억류명령 대상업체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5.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종류별 발급번호 체계 안내

중국에서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체계 관련 한-중 FTA 및 AP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참조.

원산지증명서 종류	해관(Customs)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중 FTA	K+년도(2자리)+일련번호	19+년도(2자리)+일련번호
아·태 무역협정 (APTA)	B+년도(2자리)+일련번호	01+년도(2자리)+일련번호
일반(비특혜)	발급안함	년도(2자리)+C+일련번호

---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6. (중앙관세분석소) 화학물질 품목분류 및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조회 매뉴얼

화학물질은 용어와 품목분류 체계도 복잡하여, 관련 업무 활용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관세분석소는 분석소 홈페이지 內 「유관기관정보 통합조회」의 화학물질 품목분류 및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기능 이용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

#### [유관기관정보 통합조회 바로가기]

- URL 주소 : [www.customs.go.kr/cclss/](http://www.customs.go.kr/cclss/)

「유관기관정보 통합조회」 → 「분야별 주요 정보」 →

「화학·섬유·신발·전력물자·산업」의 「EU 화학물질 품목분류 조회방법」 또는

「유해화학물질 여부 조회방법」 클릭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7.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추진배경]

한-인니 CEPA 협정이 정식 서명('20.12.18) 됨에 따라, 협정에 규정한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반영하여 협정의 이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① FTA 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WTO 협정문은 다자간(글로벌) 세이프가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FTA 체결에 의한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당사국간 합의수준에 따라 同 시행령에 추가하여 규정
- ② 잠정 FTA 세이프가드조치 신청 내용에 대한 입수방법 관보게재 및 20 일 이상 의견수렴기간 보장 대상 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 ③ FTA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 1 년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점진적인 조치완화(자유화) 대상 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 ④ WTO 협정에 따른 다자(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의 재량적 적용배제\* 대상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 FTA 체결국産 품목이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同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부 대상국가에 대해 다자(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가능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8.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7.20.(화) 개최된 제 31 회 국무회의에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이와 별개로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과 관련된 일반 절차 중 일부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신규 자유무역협정]

협정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 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

- 양국별로 각각 11,000 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를 시행령 별표에 담아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산은 전체품목의 95.8%, 이스라엘산은 95.2%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며,
- 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약으로 하고, 긴급관세의 경우 부과기간은 2년 이하로 하는 등의 협정 내용을 포함.

#### [협정관세 신청 절차]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 신청시 수입신고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관계기관 추천서는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후 15 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 연장 및, 신청 시 원본으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개선.

---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9. 관세청, 지난 1 년간 중소·중견 수출입기업 검사비용 54 억원 지원

관세청은 '20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해 '21년에는 중견기업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현재까지 약 54억원의 세관검사 비용 지원.

- '21년부터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21.6월말 기준 2만1천여개 업체가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57% 증가('20년 21억원 → '21.6월 33억원)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이 세관검사 비용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및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을 알리고 있으며, 지원대상 업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해 검사비용 지원을 직접 신청하거나, 수출입신고를 대행한 관세사에게 신청을 위탁할 수 있음.

- 문의 :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02-2107-2533~34, 37~39)
- 전자통관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unipass.customs.go.kr/>

---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10.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화정보 제공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우리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에프티에이 누리집을 통해 오늘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화정보 제공.

- 누리집 : [www.customs.go.kr/ftaportalkor](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 > 에프티에이 일반현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작년 11월 최종 서명 후 '22년 초 발효를 목표로 각국 국내 비준 절차 진행 중.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